

대안정치연구모임 창립포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전환의 시대

5월31일(수) 오후 7시
나누다봄

바람 세상을 바꾸는 꿈

I · SEOUL · U

〈토론 요지 순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흡수저당 대표 손솔	1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	5
청년좌파 대표 용혜인	9
정의당 청년미래부 부분부장 장지웅	13
※ 대안정치연구모임 향후 계획	15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흡수저당 대표 손슬

1. 19대 대선과, 문재인 정부 3주 평가

■ 19대 대선의 특징

○ 촛불혁명의 연장선 위에 치러진 조기 대선

- :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의 연장선 위에서 치러진 선거. 촛불혁명세력은 박근혜일당의 파면과 구속이라는 촛불혁명 1단계 승리에 이어 정권교체라는 2단계 승리를 거머쥔.
- :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열망이 솟구쳐 오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여론의 배경도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와 별개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잘 실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 결과로 볼 수 있음.

○ 촛불혁명 여론 주도 속 중복몰이, 안보이슈 영향력 잃어

- :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 북한 주적론, 북미군사대결 격화 속에서도 야당 후보의 지지도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공작정치로 의심되는 역대 대선 단골메뉴로 등장한 대형 안보이슈도 상대적으로 감소함.
- : '사드 배치 알박기 이슈'의 경우 차기 정부 결정론을 주장한 문재인 후보와 사드 무용론을 주장한 심상정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줌.

○ 수구보수의 분열

- : 구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하여 각각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함. 자유한국당은 반기문과 황교안의 불출마선언 이후 한 자릿수로 추락한 지지율 속에서 뒤늦게 경남도지사 홍준표를 앞세워 대구경북지역과 경남지역에서 수성하였고 득표율 2위를 기록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재결집 가능성을 보여줌.
- : 특히 막판 바른정당 의원 14인의 재입당은 제1야당으로서 개헌저지선을 유지하며 영남을 거점으로 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정국변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그러나 홍준표 지지의 대부분이 60대(45.8%), 70대 이상(50.9%) 노령인구여서 지속성 유지에 대해 회의적임.

○ 개혁보수의 등장으로 한국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 확장

- : 안철수와 국민의당, 유승민과 바른정당의 선전으로 개혁보수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한국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개혁보수의 정치 공식이 성립되어 정치권 내 안보동맹은 지속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진보적 해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또, 바른정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은 향후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제도화 이전임에도 다당제의 정착

: 20대 총선 이후 가능성을 보이다 19대 대선을 통해 안정적 정치구도로서 자리 잡은 다당제. 향후 2018년 개헌안이 현재 논의된 수준(국회추천총리, 결선투표제, 권역별비례 등)에서 가결될 경우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될 경우 20년간 유지되었던 양당체제가 붕괴될 것.

■ 문재인 정부 3주 평가

○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할 수 있는 개혁조치 실행과정에 긍정적 평가를 함.

: 인수위 기간 없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3주 간 행보를 평가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의 업무지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퇴행을 단기간에 바로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5.18기념식 기념사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줌.

○ 촛불혁명의 명령을 잘 수행한다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촛불의 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반대로 개혁행보가 주춤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2.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

○ 문재인 정권의 5년 집권기간은 적폐세력과의 대결, 개혁 vs 퇴행의 대립구도를 통해 통치기반을 넓히고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남북대화가 강조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100% 이행된다 해도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식해 놓은 극단적 양극화사회의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

1) 전체 고용의 90%가 넘는 불안정노동

당선 이후 첫 행보로, 공공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상징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안정노동의 첫 걸음이 되기는 어려울 것. 전체고용의 90%가 넘는 사기업의 불안정노동실태를 근본에서 바꾸기 위한 정책수단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도 않고, 당사자들의 저항 없이 고용주들의 선의에 기대어 해결될 일도 아님. 비정규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리행사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이는, 생애 첫 노동을 불안정노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특히 절박한 문제임.

2) 극단적 양극화가 가져온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제는 휘황찬란하게 제시되지만, 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겪는 대기업의 전근대적 결제관행, 프랜차이즈 횡포, 높은 임대료라는 3중고에서 벗어날 방법은 눈에 띄지 않음.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문제는 가계부채문제의 뇌관임.

3) 세계질서재편 및 남북화해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외교비전의 필요성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신고립주의 노선 채택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음. 독일 메르켈 총리가 G7정상회담 이후, 이제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유럽인들은 유럽의 운명을 위해 스스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본 틀’이라는 낡은 시각임.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적 여론,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국가외교비전이 필요함. 정권교체시기 당분간 보류되었던 ‘사드배치’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부각될 것으로 보임.

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불안정노동 철폐,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청년불안정노동, 취준생, 특성화고 실습생과 호흡 가능한 의제와 정책 생산필요

: 특수고용, 간접고용, 돌봄(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

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과도한 개입 금지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 :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 노조의 입장 등 아래에서부터 보고 노동3권을 보장하면, 전체고용의 90%를 차지하는 불안정노동을 걷어 낼 수 있음. 불안정노동을 걷어내는 것은 노동시장진입을 앞둔 청년세대에게도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임.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청년불안정노동, 취준생, 특성화고 실습생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제와 정책공약을 생산해야 함.

○ '비동맹 중립국가론'으로 새로운 국가외교 비전 제시

- : 중국에 대한 포위 동맹, 전 세계의 분쟁 개입 동맹으로 변질된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 증진 및 평화체제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

1. 촛불 시민 열망의 변화나 변질이나

- 박근혜 탄핵을 이뤄낸 것은 촛불 시민입니다.
 - 촛불시민의 동기는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님
 - 온라인에서 일본의 한 정치 논평 방송에서 촛불 시위가 지나치다고 놀라하면서 한국 시민들의 특권 계급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 언급한 것이 화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함.
 - 수백만의 촛불이 모일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
 - 2,30대가 겪고 있는 헬조선의 불평등, 눈 앞에서 항상 목격하는 무너진 법치 시스템, 퇴보한 민주주의에 분노
 - 속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촛불권리선언 발표에서 직접민주주의, 불평등, 노동, 교육, 재벌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옴

- 그러나 정치권은 급박한 장미 대선을 통해 촛불 정신을 너무 빠르게 문재인 vs 적폐 구도로 변질시킴
 - 강력한 이분법 프레임은 진보정당 후보의 개혁적 발언, 거대 정당과 기득권층을 향한 비판을 어렵게 만듦
 -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을 비판했을 때 일반 유권자 뿐 아니라 당원들도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는 반응
 -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나라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시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냐는 질문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적폐 프레임이 그런 상상을 막아버림.
 - 성폭력사건의 동범자인 홍준표가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고, 혐오 발언이 유력 당선 후보 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적폐 청산' '정권 교체'를 더욱 세계 외치는 선거 분위기.

- 대선 평가
 -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8%, 심상정 6.2% 라는 결과는 대선에서 5%를 넘긴 적 없는 진보 정당의 시선에서는 약진
 - 그러나 앞으로는 진보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갈 것으로 보임.

- 녹색당으로서는 전통적인 녹색당 의제였던 탈핵, 동물권 등의 의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입을 빌어 선거 기간에 눈에 띄. 매우 보수적인 목표로. 탈핵을 예로 들면 2060년까지 탈핵하자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고 최대한 탈핵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른 독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2022년, 2025년을 목표로 탈핵 선언 했는데 이보다 38년 늦은 정책을 탈핵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나 ‘탈핵’이야기만 꺼내면서 마치 진보적 후보인 것 같은 이미지를 피하는 것.

- o 녹색당으로서는 정치적 스탠드는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진보로 인식되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야 함.

- 프레임은 여러모로 녹색당 뿐 아니라 여러 진보 정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임.
- 문재인을 진보 리더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o 촛불 정신의 변질 (참여에서 다시 관망으로?)

- 촛불 정신의 변질은 시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내려앉히고 바꿔냈으면서 다시 영웅을 찾으려 하는 심리에서 비롯될 수있음.
- 위장전입으로 논란이 되었던 강경화 후보를 보면 온라인 대중의 반응, 유추해보건데 몇 달전 헬조선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거나 공감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문재인을 옹호하는 입장은 입진보들이 문재인 털 거리만 찾아나선다!라는 것과 문재인 안의 적폐를 인정하는 사람은 위장전입 안하는 사람이 어딴어! 라고 감싸는 것.
- 문재인 후보 시절 논란이 되었던 “젊은 문인”들이 만들었다고 소개된 문재인 후보 홍보 웹사이트 ‘문카운트’ 등 얼마 전 공개되었던 평론가의 워딩 ‘낮은 곳에 임하시는 문재인’ 등
- 적지 않은 수의 시민은 대통령 그 이상의 것을 문재인에게 투영시키고 있음.

2.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

1) 개헌

- o 한국사회 기초 재확인

- o 87년 헌법에서 빠진 것들, 수정해야할 것들을 집어넣어야.

사회권 / 직접민주주의 제도 (+비례성 원칙 명시) / 지방분권 / 지구권, 동물권 등

- 비교적 짧은 기간내 해낼 수 있는 과업으로는 개헌이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선 후에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다음번 지선에 개헌 투표까지 이뤄질 가능성 상당.
- 이 개헌에 내각제냐, 4년 중임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
- 개헌이라는 국면은 언제 다시 올지 모름. 결과물이 소수 정치인의 권력 나누기의 결과물이 되어선 안됨.
- 지난 87년 개헌 때 빠졌던 것들, 이후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야. 사회권에 대한 분명한 명시, 예를 들어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주거권은 없는 문제. 독일처럼 헌법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를 정확히 명시하여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게 만들 수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정부가 환경파괴와 경제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맞서 경제성장보다 인간의 연대를 중시하는 국가이념을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2008년 2011년) 한국도 개헌논의 확장해야.

2) 패러다임 변화

○ 신자유주의에서 생태사회주의로

- 문재인 후보가 말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사실 경제적 불평등과 양육강식의 논리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못 생명과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사회적 고민하는 것 필요.
- 지나쳐선 안 되는 것이 소수자. 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성소수자, 장애인, 농부, 동물 등이 해당. 국익을 위해서 소수성을 지닌 시민들의 권리, 미래세대의 자원인 지구 생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

○ 경제우선 개발논리에서 생명중심 공생논리로

- 폭발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성장과 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 그러나 이제 그 것들의 해악이 다시 돌아와 시민의 안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에너지 문제. 수도권, 도시를 위해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 삼는 핵발전소 문제. 현장의 소수 주민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용후 핵폐기물 등이 우려를 일으키고 실제로 악영향을 끼침.
- 값이 싸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를 세우고 더러운 에너지원이라고 기피 당하는 석탄을 굳이 더 쓰려고 하다보니 결국 미세먼지 문제가 나타나서 건강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있음.
- 결국 경제우선 개발논리를 생태주의로 전환해내고 개발과 생태와 안전 중 무엇을 택 하냐고 했을 때 과감히 생태를 선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과 안정성을 담보할 것.

- 엘리트 중앙 집중형 권력에서 풀뿌리 자치, 참여 민주주의로
- 지금까지 정치는 부패한 엘리트 소수 집단들이 휘둘러. 다수가 지배하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아마 여기 계시는 당원들이 선거제도가 악법이라는 것, 그리고 소수정당들이 그 안에서 존립하기는 굉장히 고되다는 것, 선거제도가 오히려 정당정치를 저해시킨다는 것을 모두 알 것. 또한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시켜야.
- 정당 정치가 가능토록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이 동반되어야 함
- 풀뿌리 정치도 문제.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유력 정치인(대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좌우돼왔던 게 사실이고 지방의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큼. 지역 내 풀뿌리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등 지역자치권을 강화시켜야.

3. 무엇을 해야 하나? - 대안정치연구모임

단기적 : 공동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 : 비례민주주의연대 / 정당 간 연대 사업

대안정치연구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의논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의회 : 비밀리에 진행하는 정권 초기의 개혁이나 소수 정치인의 권력 나누기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됨. 촛불집회-직접 민주주의의 연장선으로 거리에서 개헌 논의를 일으켜야 함.

멜랑송 지지자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개헌을 위해 진행한 거리민회

장기적 : 시민 교육

청년좌파 대표 용혜인

문재인 시대, 안녕들하십니까?

위기의 시대라는 지난 진단들이 무색해질 만큼, ‘좋은 시절입니다’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시절이다. 그 반가움을 담은 인사말에 ‘네, 참 좋은 시절이네요’라고 선뜻 답변하기에는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찝찝한 곳이 남는다. 도대체 그 찝찝함은 무엇 때문일까?

최근 1년간, 한국사회는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지난 겨울 수천만의 촛불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권자’로서 자신을 강렬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힘’, ‘촛불혁명’과 같은 말들은 아마 이 자부심을 표현하는 단어일 것이다.

‘촛불혁명’의 결과 집권하게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파격적 인사 단행과 국정 지시를 보여주며 80%가 훌쩍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숨에 취소시켜버리거나, 국민들의 건강을 현실에서 위협해왔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다거나, 인천공항에 방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비정상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정권 극초반 시기라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좀 선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주간의 문재인정권의 행보는 분명 이전의 정권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며, 민주국가의 회복과 국민적 통합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남은 5년간 문재인 정권이 현재의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에서 기인하는 경제체제의 위기와 김정은-트럼프 시대의 안보위기를 잘 버텨내며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과연 문재인 시대, 우리는 안녕할 수 있을까?

절망의 한국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청년의 위기, 여

성의 위기, 노인의 위기, 장년의 위기, 경제위기, 북한핵위기, 안보위기, 민주주의 위기,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위기의 시대'보다 '절망의 시대'가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낳는다. 극복할 수 있는 위기는 희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절망하게 만든다.

지난 2월 19일, “월세를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달 치 월세를 밀린 상태였다. “추운데 어딜 가시나, 날씨가 풀릴 때까지라도 계속 머무르시라”라는 집주인에 말에도 “미안하다”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 머무르라는 집주인의 배려에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날씨가 풀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 ‘아프지만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고 있다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하루 평균 6명이 자살한다. ‘흙수저’라거나, ‘헬조선’, 혹은 ‘죽창’같은 청년세대의 유행어들은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절망을 반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조건-일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나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절망 말이다. 이러한 변화불가능으로 인한 절망은 사회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한 박근혜정권이 2015년 9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청년문제’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권이 공세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청년문제’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대체로 ‘청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리 뺏기’라며 수세적인 대응에 그쳤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업과 저임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고 실제로 임금피크제 등의 당시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은 결코 낮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청년문제’는 특정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만들어낸 체제의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청년문제’의 해결은 곧 ‘일자리문제’의 해결이며, ‘일자리문제’의 해결은 불안정-저임금-장시간노동 이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체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안정노동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저임금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너무 낮은 임금은 또다시 장시간노동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게다가 이러한 열악한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혹은 아주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의 경쟁 속으로 뛰어들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절망한다. 문제와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이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는 당연히 불안정노동을 없애고, 임금을 올리며,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자의 고통을 단순히 '완화'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물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매월 '역대 최고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시장인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압박하는 것을 회피하고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가능할까?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은지 10년이 지났다. 한국은 위기를 정통으로 맞기보다는 연착륙을 통해 비교적 파국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경제전망 역시 장밋빛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전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자본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업 내에 현금을 축적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남은 것은 2100시간이 훌쩍 넘어 OECD 국가중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나, 박근혜정권의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완화할 뿐, 해결할 수는 없다. 위기의 시대, 우리의 대안정치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도록 바늘구멍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구멍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노동시간단축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가능성을 열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의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아주 작은 정당이 외쳤던 위기 극복의 대안들이, 이제는 기성 정당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대안이 된 것이다.

전환을 위한 한 걸음

세월호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테러방지법 등 박근혜정권 하에서 시민들은 박근혜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정치는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을 담아내지 못했다. 박근혜정권 시기, 제1야당이 130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심지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의원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총선에서 표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130석을 가지고도 ‘소수야당’을 자처했던 당시 제1야당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운동들이 정치와 단절되어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과 단절된 정치는 힘을 가질 수 없고, 정치와 단절된 사회운동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하에서 고통 받고 수탈당하고 있는 이들을 사회운동과 정치의 영역으로 조직해 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확산시켜나가는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둘러싼 싸움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지금의 대안정치가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시대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나가자. 물론 큰 틀의 합의가 아니라 아주 작고 기초적인 토론과 활동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합의와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

정의당 청년미래부 부분부장 장기웅

1주제: 지난 19대 대선을 포함, 문재인 정부의 2~3주간 초기 활동에 대한 간략한 총평

- ㄱ. 정의당에겐 아쉬움과 자부심이 공존한 선거
 -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최대 득표율 갱신 (6.2%)
 - 여론조사 기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11%의 지지율까지 얻음.
 - 초기 목표 득표율을 웃돌았지만, 두 자리수 지지율에는 못미치는 득표율로 아쉬움.
 - 남성보다 여성, 2030 세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윤곽이 나타났다고 판단.

- ㄴ. 대선에서 청년과 진보의 역할은?
 - 청년과 노동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
 - 그럼에도 소환된 청년들이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회의적.
 - 선거에서 청년은 여전히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진보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정권교체”라는 구호 아래 사라진 것을 보면, 민주당이 집권 정당인 시기에 진보 정당의 포지션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

- ㄷ. 문재인 정부 초기 활동에 대한 총평
 -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 다만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과격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현.
 - 하나의 신화가 지나고 다른 신화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

2주제: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

- ㄱ. 그럼에도 “노동”
 - 진부하고 일부 괴리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는 노동 분야.
 - 일자리 부족, 남성 중심의 근무 환경, 장시간 노동, 최저 시급의 비현실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
 - 창업에 적합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정의당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고, 이 정책부터 청년 노동에 대한 의제는 발전시킬 것 같음.

ㄴ. 핵심은 “교육”

- 이번 대선에서 4차 혁명을 이유로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겨남.
- 그러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서 공교육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음.
-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은 향후 진보정당의 활동 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 사회의 어떤 가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제도화하는 과정에 분명한 관심과 사고가 필요함.

3주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ㄱ. 진보정당도 정치를 하자

- 정치는 다른 것에서 같은 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
- 여러 이유로 진보정당간의 갈등의 골이 깊지만, 현재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아무리 작은 공통 의제라도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
- 이는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합하자는 것을 제안함.

ㄴ. 대안정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대안정치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고민.
-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을 상상해야 하는가?
- 진보 정당다운 진보적인 모습의 정치가 대안정치인가?
-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의 대안 정치인가?
-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대안정치의 방향이 구체화될수록 이 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 대안정치연구모임 향후 계획

- 대안정치연구모임은 3주마다 한 번씩 수요일 저녁에 모여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전망 마련을 위한 강좌/분임토론으로 진행합니다.
- 오늘 토론회를 포함해 4차까지의 강연은 확정되었고, 이후 프로그램은 4차까지의 강좌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수립합니다.
- 연구모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오프라인 모임, 기획단 회의, 온라인 공간에서 수렴합니다.
- 향후 프로그램(장소는 추후 공지)

- * 5월 31일(수) 저녁 7시 [창립포럼] 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 * 6월 21일(수) 저녁 7시 [강좌, 분임토론] 정당의 개념과 경로
- 강사: 김상철(노동당)
- * 7월 12일(수) 저녁 7시 [강좌, 분임토론] 한국 정당체제의 한계와 대안
- 강사: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 * 8월 9일(수) 저녁 7시 [심포지움] IT기술과 정당 내부의 민주화
- 발표: 권오현(빠띠/우주당)

- 대안정치연구모임 온라인 공간
- 빠띠: <https://parti.xyz/p/counterpolitics>